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목 차

1. 머리말	01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02
3.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07
4. 시사점: 의의 및 한계	17

지광석 연구위원
(imfine@kca.go.kr)

1. 머리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1월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¹⁾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2월 5일 이를 공고함²⁾
 - 동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함
 -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2016~18년)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기 정책을 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제품 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하여, 소비생활 관련 안전사고율이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어린이는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성장이 진행 중이며, 물거나 빠는 행동특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능력도 미흡함³⁾
 - 2018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어린이안전사고 건수는 24,09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33.5%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 비중(12.8%)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한국소비자원, 2019)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참조)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85호

3) 일본 산업성에 따르면, 어린이는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 등)의 피부흡수량은 성인의 3배, 중금속의 소화관 침투성은 성인의 5배이고 몸속 축적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짐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통계(2018)

- 따라서 어린이는 안전 취약계층으로서, 정부의 관련 정책상 우선 보호 대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사항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어린이를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와 함께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우선적 보호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음(제45조제1항)
 - 또한, 우리나라는 2003년 ‘어린이안전 원년’ 선포 이래, 총 4차례에 걸쳐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어린이제품법」 등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특별 법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지광석, 2018)
- 이에, 본고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개요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소비자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 수립 근거 및 절차
 - (수립 근거 및 기간) 동 계획은 「어린이제품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며, 제2차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기 계획임
 - (포함 사항) 동 계획에는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①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②안전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③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④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 ⑤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⑥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⑦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제5조 제2항)

- (수립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본계획(안)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 →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 기본계획 수립 → 소비자정책위원회⁵⁾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⁶⁾에 통보⁶⁾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현황

- (어린이제품 정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예: 완구, 놀이기구 등)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예: 유모차,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물품/부분품/부속품을 말함⁷⁾
 - － 단, 의약품 및 의약외품(약사법), 의료기기(의료기기법), 화장품(화장품법),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식품위생법), 유기시설/유기기구(관광진흥법)는 제외
 - －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⁸⁾에 따라 제품광고 및 포장, 제조업체의 설명, 판매장소,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사용연령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 등 어린이제품 결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어린이제품 시장)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업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 영세하고,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내 생산품의 약 3배에 달함
 - － 통계청(2018)에 따르면, 완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 제조 기업 90% 이상이 2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

5)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를 말함

6) 「어린이제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7) 「어린이제품법」 제2조 참조

8)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어린이제품의 해석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은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598호, 2016. 12. 23)

- 2018년 어린이제품 신규 인증(확인) 현황을 보면 수입제품이 13,213건이고, 국내생산제품이 4,605건임(산업통상자원부, 2019)
- o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최근 어린이제품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신기술로 인한 융복합 어린이제품 출시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위해요인이 등장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CIS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18년) 전체 안전사고(212,031건) 중 34%(72,341건)가 어린이 안전사고에 해당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되어 있음
 - 또한,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신기능의 어린이제품(예: 수영 전동보드판, 불꽃운동화, 팽창하는 개구리알, 액체괴물 등)은 기존의 어린이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위해요인을 유발함(산업통상자원부, 2019)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의 관계

- o 「소비자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수립되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는 소비자정책의 환경, 기본방향, 목표, 재원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또한, 소비자정책의 목표에는 ‘소비자안전의 강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제3호 가목)
- o 어린이안전정책은 소비자정책 내지 소비자안전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이해되므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법」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제5조제3항)

- 제1차~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해 옴
 - 특히,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과 관련한 제도, 교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과제가 다수 포함됨

〈표 1〉 제1~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내 어린이안전 관련 과제

차수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 부처
제1차 (2009~11)	1.1.1 품목별 안전기준의 마련 1.1.3 소비자의 안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표시·인증제도 개선	-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추진 - 어린이식품 녹색표시제 실시	기표원 복지부
제2차 (2012~14)	1.3.1 어린이·학생 안전 강화 3.1.3. 사회적 배려계층 소비자교육 강화	- 등하교 관련 학생 안전 확보 방안 - 미취학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 온라인상 유해 정보 유통 방지 -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대상교육 강화	교과부 식약처 방통위 소방청 ·공정위
제3차 (2015~17)	2.1.2 식품·의약품·화장품 안전체계 강화 2.1.4 안전취약계층보호 통합적 개선책 마련	- 어린이 및 학교급식 관리체계 개선 - 학교 안전교육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청소년 안전 통합적 보호시책 강구	식약처 교육부 안전처 여가부
제4차 (2018~20)	1.2.3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1.3.1 소비자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1.3.2 안전정보의 공유 및 활용 등 강화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 -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험형 교육 추진 -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 취약계층(어린이 등) 안전문화 확산 - 어린이제품안전 정보의 통합적인 제공 및 통계기반 확충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공정위 소방청 산업부

□ 제1차 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⁹⁾

- (개요) 2016년 3월 수립된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3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및 30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 － 「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Korea 건설」을 비전으로 하여, “건전한 어린이제품 안전생태계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함

[그림 1]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정책 방향	건전한 어린이제품 안전생태계 조성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① 포괄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 ② 유통시장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다각화 ③ 통관단계 수입어린이제품 관리강화 ④ 리콜제도 실효성제고
어린이제품 안전생태계 기반조성	① 어린이제품 생산기업의 수출전력화 지원 ② 어린이제품 안전 인프라 확충 ③ 어린이제품 안전 협력 강화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제품안전교육 실시 ②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③ 수요자중심의 어린이 제품안전 홍보 강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6)

○ 성과 요소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본 틀 마련) 어린이안전 취약지구(문구점, 소매

9) 이하 평가 사항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토대로 함

점)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강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어린이제품 지정 확대 등

-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선도(연구)학교(22개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50개교) 운영, 어린이제품 안전체험 시설(4개소) 구축 등
- (재정적 기반 확보) 2017년부터 약 10억 원 규모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사업’ 신설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도의 빈틈 존재) 과학적 위해도 평가 체계 미흡, 성인과 어린이 혼용 제품에 대한 관리 방안 부족,¹⁰⁾ 정기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제도 마련 검토 필요
- (업체 제품안전관리 역량 부족)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 제품의 시험·검사·인증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활용 강화 필요¹¹⁾
-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 미흡)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역할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 어린이제품 관련 전문가그룹 확대 필요

3.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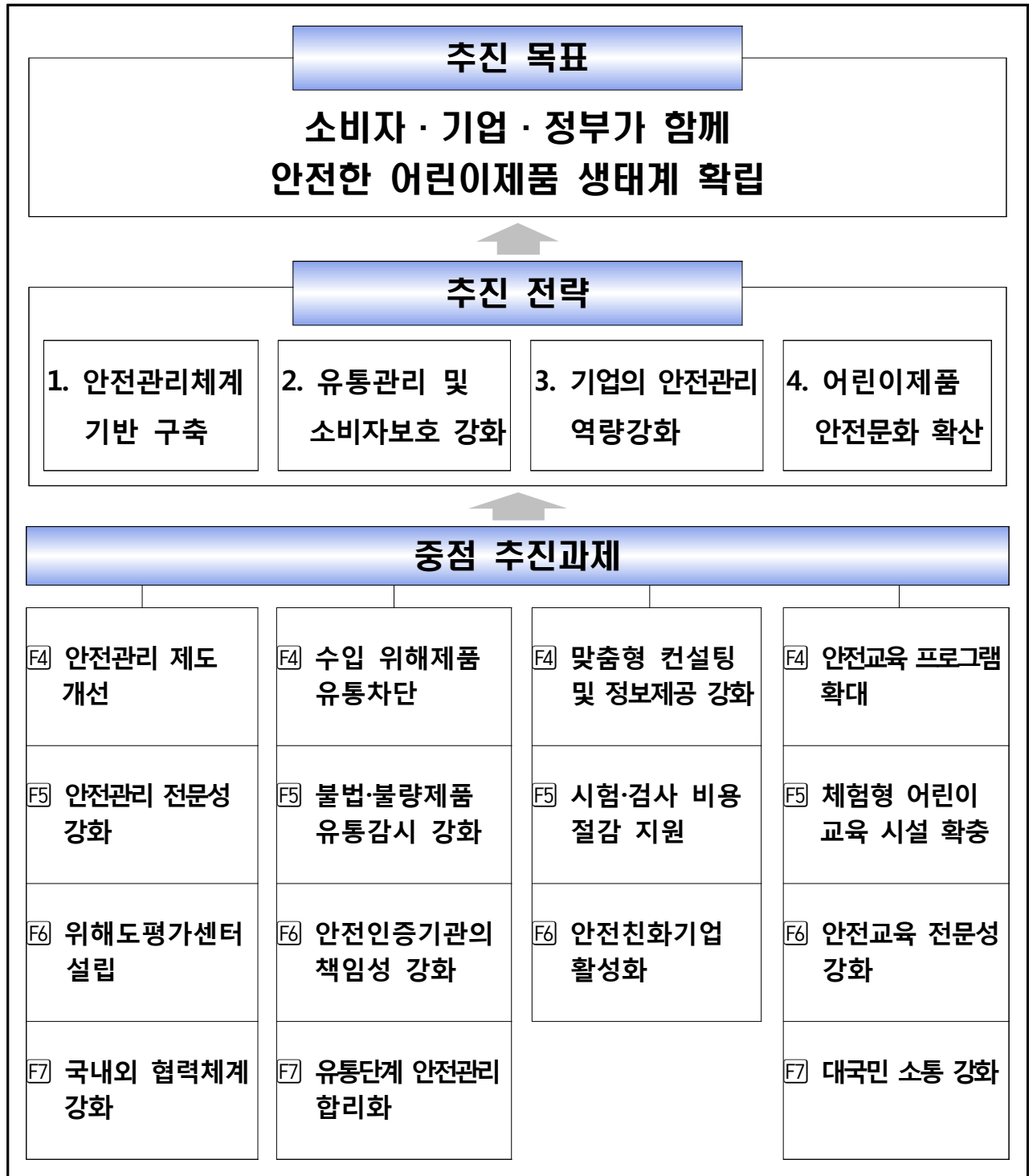
□ 추진 체계도

- 금번 계획은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과제, 3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음

10)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축구공, 농구공 및 학습교구 등이 이에 해당함

11) 정부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2018년 약 8만 건의 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함

[그림 2]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

□ 중점 및 세부 추진 과제

①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 (안전관리제도 개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명확성 제고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 어린이제품의 정의·범위, 결정요소에 대하여 구체화·객관화된 기준을 제공하고, ‘사용연령 구분 기준’(3세 이하, 8세 이하 등)을 마련

※ 성인과 어린이의 혼용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체육·학습교구 등) 관리 강화

- (안전기준 정비 및 검사지침서 개발) 현행 안전기준 중 최근 기술·제품변화,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검토·개정하고, 시험검사의 명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목별 측정 항목·부위·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검사지침서 개발

○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전문가 발굴·육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어린이제품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연구 강화) 학계·업계·소비자단체·전문기관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도·신제품·유해물질 중심으로 중장기 R&D 로드맵을 수립하여 연도별 체계적 연구 추진

-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통합정보망 구축) 시험·인증기관의 시험·검사·인증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어린이제품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업계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기준 개정에 활용

- (위해도 평가센터 설립)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해도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
 - － (위해도 평가센터 구축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제품 조사, 사고·위해 정보 수집·분석, 제품안전 기업컨설팅 등을 위한 위해도 평가센터를 제품안전관리원에 구축하고, 매년 일정 품목 이상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 － (위해도 평가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위해도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기존 ‘후속 조치형’ 안전관리에서 ‘선제·신속 대응형’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관리품목의 대상여부(관리 VS. 비관리), 수준(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적절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추진
-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 강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질적 성장 도모
 - － (정부부처·인증기관·사업자와 협력 강화) 사각지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협의회’를 활성화하고,¹²⁾ 시험·검사 및 인증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무사항을 논의하는 ‘안전인증 조정협의체’를 공식 운영하는 한편,¹³⁾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업체와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대표적 품목 중심으로 ‘품목별 협의회’ 운영
 - － (어린이제품안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주요 국제기구(정책·기술기준 협의체) 및 국가(미, EU 등)와 다자·양자협력 확대

12) ‘제1차 기본계획’을 근거로 2016년 11월 구성하여 산업부,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등이 참여하고 있음

13) 그 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한국화학융합시험연 등 지정된 6개 안전인증기관간 비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음

②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 (수입 위해제품 유통차단) 관세청과 협업강화를 통해 위해 어린이제품의 수입 차단
 - － (관세청 협업검사 강화) 관세청 ‘집중관리 10대 품목군’¹⁴⁾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검사비중과 세관 협업센터의 검사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세관 협업센터에 파견되는 검사인력(제품안전관리원) 증원
 - －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확대)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중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17개 품목 이외에 10개 품목 추가 확대¹⁵⁾
- (불법·불량제품 유통감시 강화) 소비자·정부·지자체와 조사협력을 체계화하고 선제적 대응 강화
 - － (공공조달 및 지역 어린이제품에 대한 감시 강화) 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에 대해 행안부·조달청·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지자체와 정기적 합동점검 추진
 - － (소비자중심 안전성 조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감시단’의 운영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인터넷카페, 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감시·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성조사 품목 공모제 시범 추진
 - －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제품 취약지역 범위를 확대하고,¹⁶⁾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매장 확대

14) 국민안전과 직결된 10대 품목군(식품, 의약품, 어린이제품 등)을 선정하고, 일반 품목에 비해 높은 심사·검사비율을 유지함

15) 현재,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은 안전인증대상 4개 품목과 안전확인대상 13개 품목을 합친 17개 품목인데, 여기에 2021년까지 10개 품목(안전확인대상 3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7개)을 추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임

16) 기존에는 문구점, 소매상, 재래시장, 유통단지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키즈카페나 슬라이드카페, 신종 놀이영업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인증기관의 책임성 강화) 인증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인증(확인신고)한 제품이 인증 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통되는지 감시 강화
 - － (수시검사 실효성 확보) 「어린이제품법」 상 안전인증기관의 수시검사 규정을 ‘안전인증’ → ‘안전인증+안전확인’ 품목으로 확대(완구 등)
 - －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인증제품에서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해당 인증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책임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 부과
- (유통단계 안전관리 합리화) 리콜제도 개선, 위해도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 보완을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 차단
 - － (리콜의 실효성 제고) 「제품안전기본법」 상 ‘리콜이행점검제도’와 ‘보완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¹⁷⁾ ‘제품리콜 가이드라인’ 보급
 -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근거 마련) 「어린이제품법」상 위해성이 확인된 안전확인신고 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효력상실 처분 규정 마련¹⁸⁾
 - － (동일모델 확인제도¹⁹⁾ 개선) 명칭을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증번호 체계를 변경하여 식별과 추적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위해성이 확인되어 인증취소(효력상실) 등의 행정처분 시 해당 인증(신고)번호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일괄 적용

17) 동 사항은 2019. 12. 10 신설되어 2020년 6월 11일 시행 예정임.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자가 리콜조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리콜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동법 제15조의3 및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의2 참조)

18) 동 사항은 2018. 12. 26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714) 제22조 제9항제8호, 제24조의2및 제37조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는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19)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인증제품과 유사성이 높을 시, 중복 시험·검사 항목을 생략하고 인증·확인하는 제도로 동일 인증·신고 번호를 사용함

③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맞춤형 컨설팅 및 정보제공 강화) 안전한 제품생산 및 제도준수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 － (컨설팅 및 설명회 확대)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의 안전확보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시험 전문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및 품목별 설명회 개최
 - －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인증 및 시험·검사기관에 등록된 제조·수입 업체 (15,000여개) 및 협회·단체에 정기적으로 제품안전정보 메일 발송 및 의견수렴을 하고, 제도·기술적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어린이제품 부적합 보고서, 안전기준 해설서)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유도
- (시험·검사 비용 절감 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시험·검사비용 절감을 통해 안전 제품 유통확대
 - － (시험장비 인프라 구축사업 활용 확대) 일부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전문기관)에 시험장비 구축을 지원하고,²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및 ‘개별기준이 없는 기타 어린이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시험장비 구축 및 전문인력 교육 지원
 - － (어린이제품 KC인증획득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제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KC인증을 위한 시험·검사비용의 일부분을 지원(30~70% 차등지원)
- (안전친화기업 활성화)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²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보완 및 지원방안 확대

20) 섬유·장신구 시험장비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제품안전 인프라구축 사업’ (2018년 17.4억 원)에 일부 어린이제품을 포함하여 확대 추진

21) 「어린이제품법」 제32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및 제33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참조

- (지정제도 개선·보완) 지정 평가기준을 ‘제품안전관리’ 중심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유입을 확대하고, 기존 ‘안전인증·확인 대상 제품’에서 ‘공급자 적합성확인 및 기타 어린이제품’으로 신청 대상 사업자를 확대
- (지정기업 지원방안 확대) 제품안전관리 진단 등 컨설팅 및 홍보 지원, ‘어린이제품 KC인증획득 지원사업’ 우선 지원, 안전인증제품의 정기 공장심사 및 안전성 조사대상 면제 등

④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어린이제품의 올바른 사용·구매법,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찾아가는 교육 전면 확대
 - (선도학교 지정확대 및 내실화) 주요 지역별 어린이제품관련 심층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선도학교(유치원·초등학교)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공통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동영상·완구 등 다양한 교보재를 활용한 자율적 이론·체험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제품안전 전문가의 방문교육대상을 지방소재 학교 이외에 보육원, 산후조리원,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 어린이 제품·교육·건강관련 박람회²²⁾에 제품안전 부스(체험·설명회·컨설팅)를 운영하는 ‘어린이 제품안전 로드쇼’ 추진
- (체험형 어린이교육 시설 확충) 전국 지역 거점별 어린이제품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소외지역을 위한 이동형 체험시설 도입
 - (안전체험관 확대 및 내실화) 실생활에서 어린이제품으로 기인하는 위험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안전 체험시설을 추가 구축(지자체 안전체험관 내)하

22)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어린이안전체험마을), 어린이 안전짱 박람회 등이 있음

- 고, 제품안전사고 발생장소(집안, 학교, 놀이터 등), 주요 제품(완구, 키보드 등) 특성에 따른 체험시설 설계가이드 개발
- (안전체험 버스 도입) 이동과 접근이 용이한 이동형 체험 버스를 제작·운영 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의 수혜대상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제품안전 교육체계 구성, 교육콘텐츠 개발, 전문강사 육성 등 체계적인 교육인프라 확충
 -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연구회 발족) 제품안전 교육관련 정책지원, 콘텐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수법 개발, 사업성과 분석 등 교육사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학계(대학·초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단체(어린이안전재단 등),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
 - (교육콘텐츠 개발·활용 확대) 어린이(연령별),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물은 유튜브 등 인터넷 공유
 - (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 제품안전교육의 확산을 위해 기존 일반과정(교사, 학부모, 대학생 대상) 이외에 심화과정(강사 대상)을 개발·운영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의 강사 육성
 - (대국민 소통 강화) 홍보 방법·매체를 다변화하고, 정부부처·지자체와 공조 강화
 - (인기캐릭터, 매체다각화, IT를 활용한 홍보 강화)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안전 홍보를 추진하고, 어린이와 시청이 가능한 TV채널, 영화관, 유튜브, 파워블로그를 활용한 제품안전 영상물,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며,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IT시스템 개발
 - (부처 및 지자체와 공조 확대) ‘학교안전정보센터’²³⁾에 어린이제품 안전 교

육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게재하고 온라인교육 추진 협력(교육부), 영아의 사고 예방을 위한 예비부모 대상의 제품안전 콘텐츠 제작 및 on-offline 배포 협력(복지부), 제작한 안전홍보 영상 및 브로셔 등을 지자체와 상시 공유하고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지자체)

□ 정부 협업 과제

○ 제2차 기본계획의 33개 세부과제 중에서 타 부처 혹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필요한 과제는 17개 과제(51.5%)임

－ 특히, 협업이 많이 필요한 대상은 교육부, 복지부, 관세청 및 지자체임

〈표 2〉 제2차 기본계획 내 정부 협업 과제

추진 과제	세부 과제	협업 부처/지자체						
		국조 실	교육 부	복지 부	관세 청	조달 청	공정 위	지자 체
1-4.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정부부처·인증기관·사업자와 협력 강화	○						
	어린이제품안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2-1. 수입 위해제품 유통 차단	관세청 협업검사 강화				○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확대				○			
2-2. 불법·불량제품 유통 감시 강화	소비자중심 안전성 조사		○			○		○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		○
3-2. 시험·검사 비용 절감 지원	시험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 활용 확대							○
3-3. 안전친화기업 활성화	지정제도 개선·보완				○			
	지정기업 지원방안 확대				○			
4-1.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선도학교 지정확대 및 내실화		○	○				○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		○	○				○

23) 학교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안전정보 사이트(www.schoolsafe.kr)

	대							
4-2. 체험형 어린이 교육 시설 확충	안전체험관 확대 및 내실화							○
4-3.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 연구회 발족		○	○				
	교육콘텐츠 개발·활용 확대		○	○				
	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		○	○				
4-4. 대국민 소통 강화	인기캐릭터, 매체다각화, IT를 활용한 홍보 강화		○	○				○
	부처 및 지자체와 공조 확대		○	○				○

4. 시사점: 의의 및 한계

□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에 비해,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건전한 어린이제품 안전생태계 조성’을 추진 목표로 하였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을 추진 목표로 정함
- 이를 위해, ‘3.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4대 추진 전략의 하나로 채택하여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4.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교육과 관련한 어린이의 참여와 체험 및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제2차 기본계획은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향후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특성 고려)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필요
 - － 어린이 안전사고는 연령별·활동공간별·지역별·성별로 상이한 특징을 나타내므로, 획일적 안전대책보다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지광석 외, 2018)
- (어린이 발달단계 고려) 어린이 발달단계에 따른 사고율 고려 필요
 - － 매년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의 80% 가량이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²⁴⁾ 발달단계에 따른 안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관계부처 간 협력) 소비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강화 필요
 -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각지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 과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51.5%), 소비자정책 총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 과제는 1개(어린이제품안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그침
 - － 그러나 어린이제품안전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관련 기관(기구)과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명확성) 수립 주기 및 시행 기간 명확화 필요
 - － 「어린이제품법」 제5조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²⁵⁾ 시행 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수립 주기와 불일치함

24) 한국소비자원(2019)의 ‘2018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취학전 어린이(0~6세)의 안전사고(79.9%)가 학령기 어린이(7~14세) 안전사고(20.1%)에 비해 월등히 높고, 특히 걸음마기(1~3세)가 48.5%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5) 동법 제5조제1항 참조

- 제1차 기본계획(2016~19년)은 2016년 3월 3일 공고되었으며,²⁶⁾ 제2차 기본계획(2019~21년)은 2019년 12월 5일 공고되는 등 시행 기간이 불명확함

□ 또한, 소비자안전 및 어린이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을 포괄하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제품법」 제5조제3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²⁷⁾
-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은 소비자정책 혹은 소비자안전정책의 하위 영역에 해당되므로 정부정책 간 시너지를 발휘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 계획의 주요 사항이 제5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제품 안전과 관련한 다수의 과제가 포함되었으나, 최근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중에서 다수의 부처나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4-1),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4-3), 대국민 소통 강화(4-4) 등의 과제를 제5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상호 공동추진 등)

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095호

27) 유사하게,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2항에서도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2019),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 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12월 2일자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 - 685호.

산업통상자원부(2016),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095호.

지광석(2018), 정부의 어린이안전대책 현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

지광석·김재영·이승진(2018),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I - 어린이 안전 -.

한국소비자원(2019), 2018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http://www.schoolsafe.kr>.